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유럽연합, 온라인 아동 성추행 근절관련 법안 추진¹⁾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아동 성추행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의 시민의 자유·사법·내무 위원회(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는 온라인 아동 성추행 행위 예방 및 근절을 목표로 하는 입법안 추진 입장을 채택했다. 본 입법안 추진 계획은 위원회에서 찬성 51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채택되었다.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 성추행 관련 법안의 제도적 내용, 그에 관한 찬반 논란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 유럽위원회(EC)는 2011년 아동 성추행 관련 지침(Directive 2011/93/EC, Child Sexual Abuse Directive)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채택된 법안을 통해 아동 관련 온라인 성추행 예방 및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본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가 아동 성추행을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들은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자가 원치 않는 수상한 메시지를 차단하는 기능, 부모가 자녀의 사이트 이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법안에서는 새롭게 유포됐거나 이미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아동 성추행 콘텐츠, 그리고 아동 그루밍(grooming) 정황을 포착하는 데 신기술을 포함한다. 유해파일에 온라인 지문을 기록해 두고 복사본이 배포되는지 잡아내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회원국 내 사법당국이 아동 성추행 콘텐츠 용의자를 찾기 위해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왓츠앱(Whatsapp)이나 구글 지메일(Gmail) 측에 개인 메시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암호화된 메시지 플랫폼 역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을 감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법안은 각 사법당국이 기간한정 금지 명령(time-limited orders)을 내리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즉, 아동 성추행 콘텐츠가 발각되면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해 버릴 수 있다.

- 또한 본 법안에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불법 콘텐츠들을 직접 검토하고 수사하는 유럽 연합 아동성추행 관리 센터(EU Centre on Child Sexual Abuse)를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나 그루밍 범죄를 색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종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아동 성추행 관련 활동 내역을 수집하고, 관계 당국 및 유럽연합 차원의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법안은 또한 센터 측에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상설기구인 피해자 권리 포럼(Victim's Rights and Survivors Consultative Forum)을 조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9월, 특별히 본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국가로는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체코가 있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경각성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포함하며, 캠페인 광고 영상은 4백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 지난달 아동 성착취 근절 비정부기구 글로벌 네트워크인 ECPAT(End Chil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는 유럽의회의 법안이 수개월 간의 제도적 협상 과정에서 후퇴할 결과로 큰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는 아동 성추행콘텐츠 범죄를 무력화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는 수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심되는 일부 대상자만 추적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빙산의 일각만 다루는 데 불과하고, 보다 광범위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본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추행 및 그루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온라인에서 가해자를 색출하기 어렵고, 해당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 아동 성착취물 유포 피해자들은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에 끊임없이 재배포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기약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간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반면 법안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유럽위원회(EC)의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 문제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메일, 검색 및 사이트 접속, 메시지 내역 등이 수사라는 명분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법안을 반대하는 행위가 마치 아동 보호 자체에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일부만 살짝 편집하거나 바꿔도 콘텐츠에 심어져 있던 추적 정보를 피하고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아동 온라인 성추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화두이고, 유럽연합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할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반면 법안 추진 차원에서부터 회원국이나 시민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만큼, 향후 이행방안 조율 과정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참고문헌·

ECPAT (2023.11.9) "Child rights activists and survivors say European Parliament's compromised child sexual abuse regulation is failing children", <https://ecpat.org/ecpat-survivors-children-eu-regulation-online-safety/> (접속일자: 2023.12.15.)

EURACTIV (2023.10.16) "EU Commission's microtargeting to promote law on child abuse under scrutiny", <https://www.euractiv.com/section/law-enforcement/news/eu-commissions-microtargeting-to-promote-law-on-child-abuse-under-scrutiny/> (접속일자: 2023.12.15.)

Euronews (2023.10.19) "Planned EU laws on child sexual abuse have sparked a bitter privacy row. Why?",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3/10/19/planned-eu-laws-on-child-sexual-abuse-have-sparked-a-bitter-privacy-row-why> (접속일자: 2023.12.15.)

European Parliament (2023.11.14) "Child sexual abuse online: effective measures, no mass surveillanc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110IPR10118/child-sexual-abuse-online-effective-measures-no-mass-surveillance> (접속일자: 2023.12.15.)

European Parliament (2023.10.20) "New legislation to fight child sexual abuse online: In 'Promoting our European Way of Life'",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theme-promoting-our-european-way-of-life/file-combating-child-sexual-abuse-online> (접속일자: 2023.12.15.)

유럽연합, 비동의 강간죄에 관한 찬반 공방 지속²⁾

- 2023년 12월 13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유럽의회)가 모인 3자 협상이 열렸다. 의제는 바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여성대상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지침안(Directive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성폭력에 관한 정의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본고에서는 지침안 관련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유럽위원회는 여성대상폭력 근절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했고,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지침안에서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는 합의 없이 행하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즉,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지침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2)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위와 같은 합의에 기반한 성폭력 정의가 이루어져야 피해자를 제도상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 이러한 법적 조항이 없는 국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측이 위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는 데다가, 회원국마다 성폭력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회원국 내 성폭력 피해자, 특히 여성이 피해자로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는 낮고,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2차 위협이나 사회적 주홍 글씨가 두려워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 왔다.
- 또한 본 지침안은 강제 혼인, 할례, 온라인 성추행, 강제 불임수술 등의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9월, 유럽연합 연례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유럽연합 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범죄화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여성대상폭력 근절, 강제 혼인이나 온라인 성추행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성폭력 정의에 있어서만큼은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갈리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찬성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은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 특히 프랑스 정부의 경우, 시위 및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폭력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테러리즘, 부패, 성착취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유럽연합이 지침안에 성폭력 관련 내용을 담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회원국들이 국내 형법 조항과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합의’를 정의하거나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모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마다 성폭력을 범죄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에 상관없이 양분된 양상을 보인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력을 통한 성관계로 판명되었을 때 성폭력이라고 보는 형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성폭력을 정의할 때 합의 여부를 포함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 성폭력은 일정 수준의 힘, 권력, 협박을 가해 이뤄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13개 회원국만 합의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Human Right Watch는 2023년 11월, 프랑스 정부 측에 유럽연합 지침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이자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최근 몇 년간 프랑스는 성폭력과 기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 최소 연령은 15세로 설정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가정폭력 및 여성대상폭력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 본 지침안 합의가 무산되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 지침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정부에게 유럽연합의 지침안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단체들의 지침안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의 제도적 해석이 다르다 보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행이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국내 정치적·사회적 찬반 논쟁 역시 계속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지침안 협의는 2024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은 벨기에이고, 임기는 6개월이다. 다음 의장국은 지침안에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다. 그동안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만큼 협상 과정이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게 될 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AP News (2023.11.25) "Activists call on France to endorse a consent-based rape definition across the entire European Union", <https://apnews.com/article/eu-rape-law-definition-consent-protest-7f73e19bd943e5d2e308143dd51dd555> (접속일자: 2024.1.19.)
- Euractiv (2023.12.14) "Paris under fire after latest refusal to adopt EU-wide rape definition",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paris-under-fire-after-latest-refusal-to-adopt-eu-wide-rape-definition/> (접속일자: 2024.1.19.)
- Euranet Plus (2023.9.22), "Defining consent in europe", <https://euranetplus-inside.eu/defining-consent-in-europe/> (접속일자: 2024.1.19.)
- Human Rights Watch (2023.11.22), "Human Rights Watch letter to the French Government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EU Directive on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hrw.org/news/2023/11/22/human-rights-watch-letter-french-government-definition-rape-eu-directive-violence> (접속일자: 2024.1.19.)
- Le Monde (2023.11.16), "France opposes draft EU-wide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3/11/16/france-opposes-draft-eu-wide-definition-of-rape_6261066_4.html (접속일자: 2024.1.19.)
- Human Rights Watch (2023.11.22), "Human Rights Watch letter to the French Government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EU Directive on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hrw.org/news/2023/11/22/human-rights-watch-letter-french-government-definition-rape-eu-directive-violence> (접속일자: 2024.1.19.)
- Le Monde (2023.11.16), "France opposes draft EU-wide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3/11/16/france-opposes-draft-eu-wide-definition-of-rape_6261066_4.html (접속일자: 2024.1.19.)

영국 보건사회부, 2024년 여성건강정책 우선순위(Women's Health Priorities) 발표³⁾

- 영국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4년 1월에 열린 여성건강회의(Women's Health Summit)에서 2023년 발표한 여성건강정책(Women's Health Strategy)의 2차년도인 2024년에 우선순위로 집중할 여성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보건사회부는 2024년에 월경통 및 월경 불규칙을 포함하는 월경문제(Period Problems),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수감여성 지원, 여성건강연구 지원, 산모 건강과 출산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인 빅토리아 앳킨스(Victoria Atkins)는 여성건강정책의 1차년도 성과를 “약 50만명의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치료(Hormone Replacement Treatment: HRT) 비용을 절감했고, 모든 지역에 여성건강센터(Women's Health Hubs)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여성건강장관(Minister for Women's Health)인 마리아 콜필드(Maria Caulfield)는 2024년 여성건강 우선순위 정책에 대해, “월경문제로 고생하는 여성과 여아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 교육, 그리고 커리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며, “출산 이후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은 해당 트라우마가 그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에서는 여성건강정책의 2차년도 우선순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 월경문제(Problem Periods) 및 부인과 건강 관련 지원

 - 영국 보건사회부는 1차년도에 각 지역에 신설한 여성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에게 월경과 부인과 건강에 관련한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책자는 극심한 월경통이나 자궁내막증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갱신하여 여성건강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극심한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피임약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자에 교육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다. 영국 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월경통과 자궁내막증이 직장에서의 여성의 성과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이며, 이는 해당 증상/질환에 대한 진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성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수감여성 지원

 - 성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체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원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감옥에 수감된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감옥에 수감된 여성이 수감 남성과 사회에 있는 여성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더 많이 겪고,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3)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이러한 여성 수감자의 높은 보건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 말, 여성 건강돌봄 법체계 파트너십(Women's Health, Social Care and Justice Partnership Board)이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하여 신설되었다. 해당 파트너십은 2024년 봄부터 3년간 약 2.1억 파운드(한화 약 355억 원)를 지원받아 여성 수감자의 건강과 돌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행 및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모건강과 산모건강격차에 대한 지원

- 산모건강 지원정책의 경우 기존에 국가보건의료서비스에서 진행하던 산모건강 사업은 물론 산전건강부터 산후건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해당 사업의 핵심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후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홍보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여성건강정책은 출산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출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얻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많은 경우 출산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은 다음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영국의회(UK Parliament)는 관련해서 출산 트라우마의 이유와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제언을 개발하고 2024년 4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산모건강격차에 대한 정책은 인종과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산전/산후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유산·사산·모성사망 같은 여러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영국 보건사회부에 의하면, 흑인여성은 백인여성에 비해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40% 높고, 취약계층 거주지역에서 사산아 출산율이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소수인종여성과 취약계층 거주지역 여성들에 집중한 산모건강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Research)은 약 4.2억 파운드(한화 약 710억 원)를 지원받아 연구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산모건강격차에 관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UK GOV. (2024.01.17.), "Health Secretary announces new women's health priorities for 20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secretary-announces-new-womens-health-priorities-for-2024> (접속일: 2024.01.20.)

UK GOV. (2024.01.17.), "Women's Health Strategy: 2024 prio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womens-health-strategy-priorities-secretary-of-state-speech> (접속일: 2024.01.20.)

The Guardian. (2024.01.09.), "'Read taboo': include birth trauma in UK women's health strateg, MP urge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4/jan/09/real-taboo-include-birth-trauma-in-uk-womens-health-strategy-mp-urges> (접속일: 2024.01.25.)

UK GOV. (2022.02.23.), "New taskforce to level-up maternity care and tackle dispa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taskforce-to-level-up-maternity-care-and-tackle-disparities> (접속일: 2024.01.25.)

UK GOV. (2023.11.23.), "A review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women's pris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review-of-health-and-social-care-in-womens-prisons> (접속일: 2024.01.25.)

NHS (2023.13.30.), "Three year delivery plan for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 <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three-year-delivery-plan-for-maternity-and-neonatal-services/> (접속일: 2024.01.25.)

아일랜드 성별임금격차 공개법 이행 현황⁴⁾

-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9.6%를 기록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남성 근로자는 27.73유로(한화 약 4만원), 여성은 25.06유로(한화 약 3만 6천원)이다. 본고에서는 아일랜드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별로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12.7%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20.5%), 오스트리아(18.8%), 독일(17.6%) 순이었고,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2%), 루마니아(3.6%), 슬로베니아(3.8%)였다.
- 2026년 6월부터는 유럽연합의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이 발효됨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 지침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지침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행정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게 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임금 투명성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와 같은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 아일랜드에서는 2021년 7월, 성별임금격차 정보법(Gender Pay Gap Information Act)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5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 및 민간분야 기관들은 성별 임금 내역을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올해까지는 150명 이상, 2025년까지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해당 법은 아일랜드 아동평등장애통합청년부(The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에서 관할하고 있다.
- 2022년의 경우는 대상 기관이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나 영업시간 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정부의 중앙 웹사이트에 시간당 성별 임금 내역을 기입하는 방식이었다.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가장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내역뿐만 아니라 성별 보너스 지급 비율 및 금액,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성별 임금, 임금 수준 사분위별 성별 비율 등 매우 세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성별임금격차 정보법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 부처 역시 각 부처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보고서로 공개하는데, 한 예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2023년 보고서에서 부처 내 직원 616명(여성 278명, 남성 338명)의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2022년

4) 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20.42%에서 2023년 13.7%로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1유로(한화 약 7천 3백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 외에도 성별임금격차 현황 보고서에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임금격차를 계산한 방법, 직군별 성별 분포, 사분위수 구간별 임금 격차 세부 현황 등도 상세히 공개했다.

- 아일랜드 통계청(CSO)은 근로 분야, 기업 규모, 근로 기간, 사기업 또는 공기업 여부, 전일제/시간제, 국적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부적인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 보험 및 부동산 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는 24.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시간당 남성 41.93유로(한화 약 6만원), 여성 31.59유로(한화 약 4만 5천원)), 이어 전문직, 과학기술 분야 역시 18.6%, 행정 분야 17.1%가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낮은 분야는 교육 2.7% (시간당 남성 36.64유로(한화 약 5만 2천원), 여성 35.65유로(한화 약 5만 1천원)), 공공행정 및 방위 3.5%, 교통 및 물류 4.9%였다.
- 성별임금격차에서 연령별 격차를 살펴보면, 고령일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의 경우 -0.3%를 기록하여 오히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아주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 50~59세의 경우 연령별 성별임금격차는 16.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7년 아일랜드의 성별임금격차는 17.3%였다. 2022년 9.6%으로 나타났으니 그 수치가 한 자릿수대로 하락한 것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약 1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아일랜드의 일간지인 The Irish Times는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 가사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경력 개발이나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남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앞으로 아일랜드가 성별임금격차 정보법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European Parliament(2023.4.5.), "Gender pay gap in Europe: facts and figures (infographic)", <https://www.europarl.europa.eu/topics/en/article/20200227STO73519/gender-pay-gap-in-europe-facts-and-figures-infographic>(접속일: 2024.2.21.)

Irish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23), "Gender Pay Gap Report", <https://assets.gov.ie/279281/cd365198-e093-46f0-ba4e-3acc6cf92503.pdf>(접속일: 2024.2.21.)

KPMG (2023.5.18.), "How to report on your gender pay gap", <https://kpmg.com/ie/en/home/insights/2022/05/gender-pay-gap-reporting.html>(접속일: 2024.2.21.)

The Irish Times(2023.10.18.), "State's gender pay gap was 9.6% last year, CSO finds",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2023/10/18/states-gender-pay-gap-was-96-last-year-cso-finds/>(접속일: 2024.2.21.)

The Irish Times(2024. 2.12), "Progress might be slow but the gender pay gap is shrinking",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2024/02/12/progress-might-be-slow-but-the-gender-pay-gap-is-shrinking/>(접속일: 2024.2.21.)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2040년까지 자궁경부암 종식 선언⁵⁾

-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대표 아만다 프리тчard(Amanda Pritchard)는 2023년 연례 학회에서 2040년까지 영국 내 자궁경부암 발병 종식을 목표로한다고 세계 최초로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종식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하의 발병률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목표에도달하기 위해 영국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궁경부암 검사 횟수 증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서는 해당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HPV 백신 접종 접근장벽 완화

 -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 중 99%가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에 지속하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영국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지원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하 백신) 접종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두고 접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청소년의 경우 10학년 전까지 여성 청소년 6명당 1명, 남성 청소년 5명당 1명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2세에서 13세 여성과 남성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주민센터에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을 도입하였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백신 접종을 2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집단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확인되어,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학교와 주민센터 기반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2세에서 13세 청소년을 둔 모든 양육자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청소년 이외에도 다른 인구집단의 백신접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국가의료보건서비스는 직원들을 파견해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체육관 등에서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뿐 아니라 혈압검사, 간단한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백신 접종 공간을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전국 단위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앱을 활성화하여 백신접종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 자궁경부암 검사 확대

 -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가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여성들은 25세가 되기 6개월 전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병원에

5)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방문할 것을 권고받는다. 24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들은 3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연락을 받고, 50세에서 64세의 여성들은 5년마다 연락을 받는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가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에서 여성 3명 중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자궁경부암 검사로 70%의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여성이 해당 검사를 받을 경우 83%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영국 정부는 검사 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병원에 방문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기채취(self-sampling) 방법을 정책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 기존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검사 대상이 병원에 방문하고 의사가 자궁 내의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 보내 위험이 높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식이라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식은 여성들이 면봉으로 자기 자궁 내 샘플을 스스로 채취하는 자기채취 방식이다. 2021년 영국에서는 자궁경부암 자기채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5천 건의 샘플을 채취하여 1,750건의 질확대경 샘플과 비교하여 해당 방식의 정확성을 연구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자기채취 방식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10만 명당 4명 이하로 유지하여, 자궁경부암 종식을 선언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향후 20년 내에 자궁경부암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여러 방법의 사업평가를 지속하고, 효과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NHS(2023.11.15.), "NHS sets ambition to eliminate cervical cancer by 2040", <https://www.england.nhs.uk/2023/11/nhs-sets-ambition-to-eliminate-cervical-cancer-by-2040>(접속일: 2024.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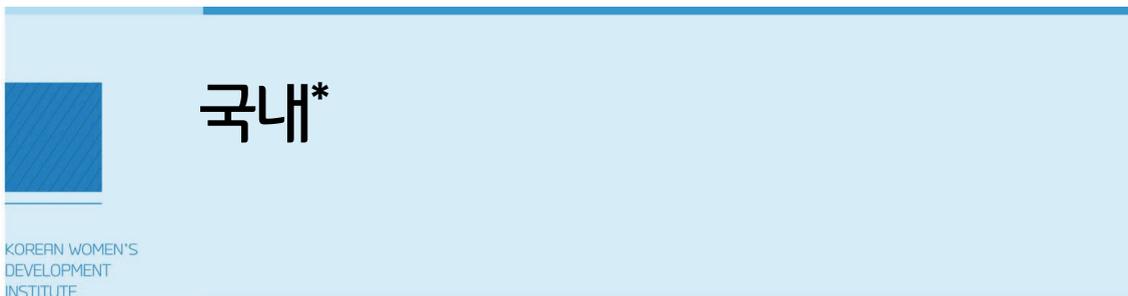
UK GOV(2021.03.17.),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overview", <https://www.gov.uk/guidance/cervical-screening-programme-overview>(접속일: 2024.02.25.)

UK GOV(2023.01.21.), "HPV validate cervical screening self-sampling study nears completion", <https://nationalscreening.blog.gov.uk/2023/06/21/hpvalidate-cervical-screening-self-sampling-study-nears-completion>(접속일: 2024.02.25.)

UK GOV(2019), "Adult Screening Programme: Cervical Cancer", <https://view-health-screening-recommendations.service.gov.uk/cervical-cancer>(접속일: 2024.02.25.)

NHS(2023.01.05.),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and Colposcopy Manag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ervical-screening-programme-and-colposcopy-management/1-introduction-and-programme-policy>(접속일: 2024.02.25.)

NHS(2024.01.23.), "Thousands more young people urged to take up HPV vaccine to meet NHS cervical cancer elimination goal", <https://www.england.nhs.uk/2024/01/thousands-more-young-people-urged-to-take-up-hpv-vaccine>(접속일: 2024.02.25.)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4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2024년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
 - 교대근무인력을 증원하여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하고, 112신고 연계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구비하여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1.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71

여성가족부,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

- 여성가족부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청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
 -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0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8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확정

-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
-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19

여성가족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4년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5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
- 2024년에는 운영기관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통합솔루션지원단 기능에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하여 시범 운영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05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30명) 결정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며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중복 제외)은 504명,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0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어 ▲ 채팅앱, 웹사이트 등 온라인 성매매·성착취 대응 제고 ▲유해매체 점검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강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성매매 방지 점검 및 단속 협업 강화 등 논의
-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전국 17개소)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

센터'로 개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연계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등 종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단속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1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14

여성가족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 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서비스 신청 시간을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17

여성가족부,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2023년 처음 발간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사업, 제·개정 법령을 수록하였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의 고용과 취·창업 지원, 기업활동 및 다양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 부문별 현황과 변화 추이를 통계 중심으로 서술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30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
 - 2024년부터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지속할 계획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34

여성가족부, 2023년 불법촬영물 24만건 삭제 지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3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24만 3855건 삭제를 지원
 - 이는 2022년(21만 3,602건) 대비 14.2% 늘어난 수치이며,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 건수는 전체의 21.6%인 총 5만 2,685건에 이릅니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3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 2024년에는 2023년 8.5만에서 11만 가구로 정부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 10%만 부담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0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4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추진
 - 2024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이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2024년 월 21만 원으로 인상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 확대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0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45

여성가족부,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추진
 -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

등,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1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55

여성가족부, 2024년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모집

-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사업에 참여할 여성과 기업 모집
 -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턴으로 연계하며 2024년 사업 참여 인원 7천 800명을 목표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60

여성가족부,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 가족 누구나 시·군·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신청 가능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66

여성가족부, 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기초 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 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상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능력 향하고, 사업대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총 168억원)도 신규로 추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6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65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 발간

-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하고, 한국기자협회 202개 회원사 등에 배포
 -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 판례 보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74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신규 지정 협약식 개최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1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 개최
 -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은 경남 김해시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이 수상했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인천 서구 등 1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 추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2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76

여성가족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선정
 - 2024년부터는 통합지원단이 기초 단위 지원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줄여 나갈 계획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1.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78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안내 등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함께 소개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0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05

여성가족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
 -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인증 유지)을 22개사에서 2024년 70개사로 확대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 독려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 원으로 인상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jw6uJYDaBNDdfmBFvIzODV9l.mogef20?mid=news405&bbtSn=709823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여성가족부는 산업별,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676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직업교육훈련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과정 55개 ▲기업맞춤형(취업연계) 과정 126개 ▲지식재산 등 전문기술 과정 96개 ▲창업 과정 61개 ▲일반훈련 과정 338개 등 총 676개 과정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27

여성가족부,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적발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 2023년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했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37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2.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42

[교육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일원화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3.12.0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5567

[법무부]

법무부, 스톡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 법무부는 스톡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톡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스톡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참고문헌 •

[법무부 보도자료, 2024.01.12.]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5MDAy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VV5kZGVTdHlI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i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V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확정
-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으며 3대 전략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설정

•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2.1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580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공개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는 복지와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3대 전략 아래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등 중점 과제 포함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2.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
 -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최대 40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12.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79565&tag=&nPage=3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복지 정책 공유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도 국장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내용과 시·도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시·도 국장회의 개최
 - 2024년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시·도 의견 수렴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2.0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

- 고용노동부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
 -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02.2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32

[통계청]

통계청,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 발표

-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용자 이해를 제고하고자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과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
 -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 중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0조 원으로 남성이 생산한 134.9조 원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참고문헌 •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0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act=view&list_no=428330&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bodo_b_type=all

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발표

- 통계청은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혼부부통계 결과 발표
 - 2022년 신혼부부는 103만 2천 쌍으로 2021년보다 6.3%(6만 9천 쌍) 감소했으며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3.6%로 0.6%p 하락하고, 평균 자녀 수는 0.65명으로 0.01명 감소

• 참고문헌 •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11.]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5&act=view&list_no=428407&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bodo_b_type=all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공개

- 통계청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중 주요 지표(안) 공개
 -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현황,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으로 세부 지표 구분

• 참고문헌 •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26.]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8747&tag=&nPage=2&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bodo_b_type=all